

‘S·R’ 공포 현실화… “향후 시장, 통화정책·보복관세가 좌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일주일 새 무려 4번의 크고 작은 ‘블랙 데이’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오가며 강타했다.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지역 구분도 없다. 모조리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형국이다. 2025년 새해의 문을 열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올해 최대의 악재로 전세계 시장을 휘저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괜찮겠지”→“설마”→“아차”까지 불과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불안한 투자자가 자산 현금화에 나서면서 금융시스템이 요동치고, 관세전쟁의 여진이 글로벌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S(스태그플레이션)’와 ‘R(recession, 경기침체)’ 공포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한국이 처한 상황, 대처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경제와 금융시장에 내상이 작지 않을 거로 보인다.

트럼프, 고강도 관세정책 강행 美 증시 연일 폭락… 전 세계 파장 “공급망 붕괴 등 영향 확대될 것”

◆과거 위기와 다른 ‘트럼프 스톱’

한국이 겪었던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복기하면 지금과 차이가 있다. 1987년 블랙먼데이는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자본시장 개방(1998년)이 늦었던 한국은 당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대로 1998년 외환위기는 아시아 중심의 위기였다. 한국 내부의 부실한 금융시스템이 출발점 이었고, 국내에선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등 서구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



지난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롤랜드하이츠의 한 아시아 식품점에 식료품들을 가득 실은 쇼핑 카트가 서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정책이 발표되고 가격 급등을 우려한 미국인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으로 파장이 컸다. 다만 국가별, 대륙별로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았고, 회복도 빨랐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시기에도 전 세계적 시장이 출렁였다.

시장에선 이번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위험 자산 투자 규제가 강화돼 당시보다 자산 건전성이 좋다는 게 핵심 근거다. 금융만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미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펀드멘털은 좋다’와 같은 지지대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다. JP모건체이스의 브루스 카스만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투자자 노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1968년 이래 가가와 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라고 표현하면서 “보복, 미국 기업의

심리 위축, 공급망 붕괴 등을 통해 이번 세금 인상의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회청이는 글로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이를 말해준다.

앤젤레스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로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트럼프가 관세와 무역 정책을 쉽게 포기할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주가 하락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나쁘고 일관성 없는 무역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앞으로 펼쳐질 시장의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중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본다. 문흥철 DB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성은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것”이라며 “향후 연준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의 대폭적인 추가 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시장 충격을 결정할 것은 유럽, 특히 중국의 대응”이라며 “중국은

이미 보복관세와 희토류 무기화 등을 발표했는데 보복관세는 1930년대 관세전쟁에서 대공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으므로 경제에 추가로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美 등 주요국 통화정책 오락가락 韓 부담 가중… 성장률 ‘적신호’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마련해야”

◆韓, 관세전쟁 직격탄… 경제위기 그림자

미국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더 치명적이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뛰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도 어려워질 수 있다.

각국의 오락가락 통화정책도 우리경제에 부담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도가 예상보다 커졌다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더 지속될 수 있다면서도 통화정책 변화를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기다리면서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연준 의장 파월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완벽한 시간”이라는 글을 올린 뒤에 나왔다. 3월 기준금리를 ‘0.5% 정도’로 동결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기조도 후퇴하고 있다.

각국의 통화정책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데 따른 글로벌 자금 흐름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더해지며 금융시장은 당분간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뒷걸음질하는 성장률,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들쭉이는 부동산 시장 등 우리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의 걸림돌이다. 영국의 민간 연구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내렸으며, 바클리(Barclays)는 1.6%에서 1.4%, HSBC는 1.7%에서 1.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S&P의 경우 한국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1.2%로 무려 0.8%포인트 낮추기도 했다.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융당국, 100조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 “대외여건 급격히 악화… 수출 하방 압력”

금융상황점검회의

김병환 금융위원장, 대응방향 논의 “자금 공급 등 적시에 지원 이뤄져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수출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 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나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국내의 경제·산업과 금융시장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2개월가량 남은 만큼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를 하는 등 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수출기업과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을 적시에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지 취해

질 수 있도록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준비·집행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 기금을 조성하는 등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중인 정책은 일점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DI “기업심리 위축되고 있어”

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라, 수출을 비롯한 경제 각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경제상황과 관련해 “대의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대내외 수요 증가세가 축소됨에 따라 생산이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국제통상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KDI의 ‘경기 하방위험 증대’라는 표현은 지난 1월호 경제동향에서 2년 만에 처음 나온 뒤 4개월 연속으로 등장했다. 게다가 4월호에서는 “대의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라는 표현까지 추가됐다.

KDI 분석에 따르면 3월 수출 증가율은 전월(0.7%)보다 높았으나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점차 조정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ICT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38.5%에서 4분기 27.5%, 올해 1

분기 6.1% 등으로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또 ICT와 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3월 0.8% 감소했다.

KDI는 “4월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의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내수 경기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2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지만 올해 설 연휴가 1월로 이동한 조업일수 증가 영향이 컸다. 건설업 생산의 경우 21.0%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에서 73.1%로 미끄러졌다.

소비 부진 역시 지속됐다. 2월 소매 판매는 전년동월에 비해 2.3%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 반등으로 내구재(13.7%) 판매는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준내구재(-6.8%)와 비내구재(-7.5%) 소비는 감소했다. 고용 여건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제조업(-7만4000명)과 건설업(-16만7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실업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